

2026 중간선거: 미국 성장모델의 시험대



Market Analyst

강진혁

☎ (02) 3772-2329

✉ kjinhyeok@shinhan.com

美 중간선거, 무엇이 결정되고 권력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435석 전체+상원 35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주지사 36석). 민주당 하원 탈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원은 경합 구도다. 의회 구성에 따라 정책 추진 여건은 달라지겠지만 대통령의 행정 권한 등을 고려하면 정책의 전면 전환보다는 예산·감독·세제 지원의 부분적 조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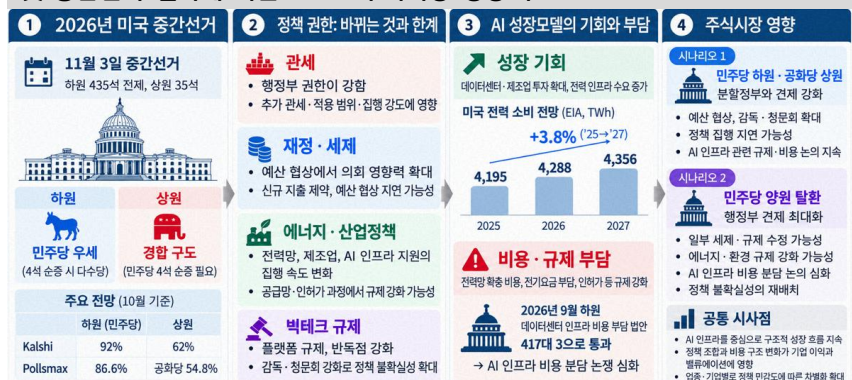
미국 성장모델의 제약과 정책 간 긴장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는 세 가지 긴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① AI Capex 확대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 수요를 뒷받침하지만 전력 확보 비용과 자금조달, 투자 회수의 제약을 동반한다. ② 관세와 제조업 보호 정책은 공급망 안보와 현지 생산을 강화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업 원가와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③ 전략산업 지원 역시 패권 유지라는 초당적 목표를 공유하나 재정 여력과 의회의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방식이 달라진다. 선거 결과 자체보다 정책 제약이 실제 투자·비용·수익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

선거 결과보다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익 지속성

2027년 주식시장은 정책 수혜와 주가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AI Capex가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지, 전력·자본·수용성 제약이 Capex 일정과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지에 따라 기업별 이익·멀티플이 차별화될 수 있다. 한국도 AI 반도체·전력 인프라는 집행 시점에 따라 수혜 강도가 달라지며, 자동차·배터리 등은 관세·현지화 비용·정책 지원 조건에 따라 실적이 결정된다. 결국 핵심은 AI Capex·관세·지원 등 정책 제약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과 비용 부담을 수익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2027 주식시장 영향 구조도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6 중간선거: 미국 성장모델의 시험대

I. 무엇이 결정되고 권력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중간선거는 Trump 2기 정책의 속도를 결정

중간선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역할:
이번 선거 관심은 생활비
물가, 경제 운영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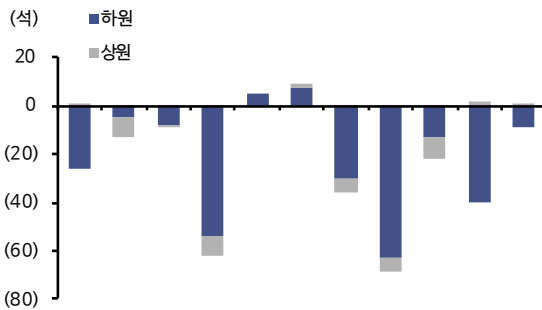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은 '의회 권력 재편'이다. 다수당은 입법과 예산 통제력을 가지며 대통령의 정책 추진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11월 3일 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의 향방이 중요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Trump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관세·재정·규제 정책이 어떤 경로로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변수다.

2024년 대선 결과 공화당은 백악관+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통합정부를 구성했다. 이는 Trump 행정부가 관세와 감세, 이민·산업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됐다. 그렇지만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하원 의석을 잃는 경향이 뚜렷하다. 1934~2022년 실시된 중간선거 23회 중 20회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의 하원 의석이 감소했고(1934·1998·2002년 예외), 평균 감소 폭은 약 32석이었다. 이는 중간선거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상원에서는 23회 중 15번 의석을 잃었다(평균 6.5석).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주요 관심은 생활비와 물가, 에너지 비용,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다. 2026년 10월 5일 발표된 Reuters/Ipsos 조사에서는 응답자 52%가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뽑았다. 물가에 대한 불만은 전체 응답자의 67%에 달했고 공화당 지지자 37%가 물가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민주당 93%). 이는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지지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체감경기 악화가 곧바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원은 전국적 민심 변화가 의석으로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2년마다 전체 435석 교체) 상원은 주별로 선거 대상 의석이 제한되어 있다(2년마다 1/3씩 교체). 즉,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전국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상원에서 교체 대상이 아닌 2/3 의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하원과 상원의 결과는 별도로 전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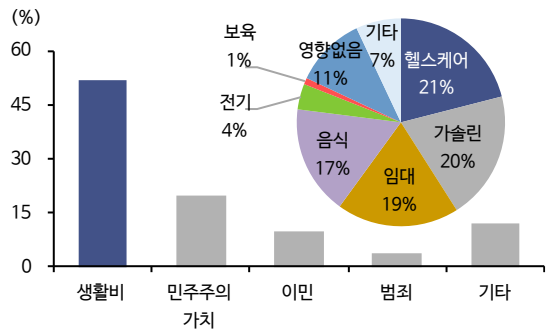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집권당 → 정권 심판 성격



자료: 신한투자증권

주: 여당 정당의 상하원 순증감 추이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주요 관심은 생활비



자료: Reuter/Ipsos, 신한투자증권

주: 2026년 10월 5일 기준

하원 민주당 탈환은 예산·감독 권한 통한 견제 ↑. 다만 법률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등 제약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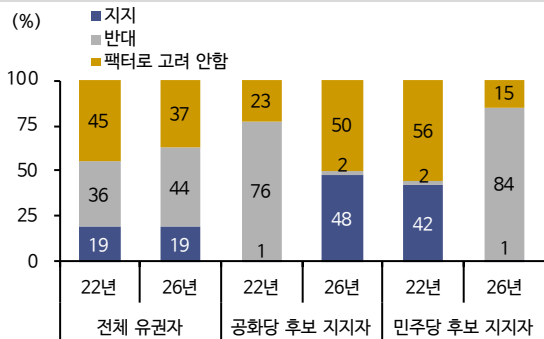
선거 판세: 하원은 민주당 우세, 상원은 불확실성 지속

전체 유권자 중 대통령 지지율을 투표 판단의 팩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2년 45%에서 2026년 37%로 낮아졌다. 즉, 대통령 평가가 선거 판단과 연결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전 장기화, 물가 부담 등에 따라 집권 2년차인 Trump 2기 지지율은 1기 대비해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 순증 4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 구도에서는 소수 지역구의 결과만으로도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② 상원은 공화당이 현재 53석을 보유하고 있고 민주당 진영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47석으로 과반을 위해서 최소 4석의 순증이 필요하다. 상원은 주별 성향이나 후보 개인 지지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전국적 지지율과 무관하게 다수당 지위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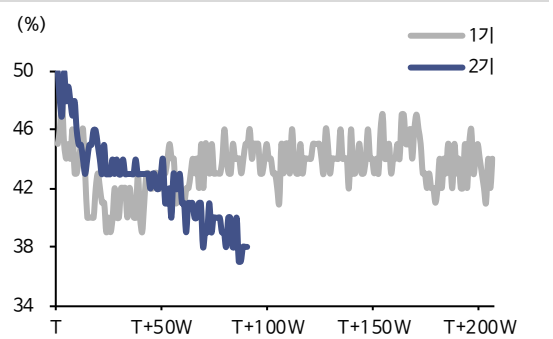
주식시장은 '의회 구도 변화'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 ①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면 행정부 견제는 강화되나, 상원·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은 제약이 따른다. ②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 각각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중간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과거 주식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대 선거 이후의 주가 흐름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중간선거 대비 대통령 지지율 팩터 중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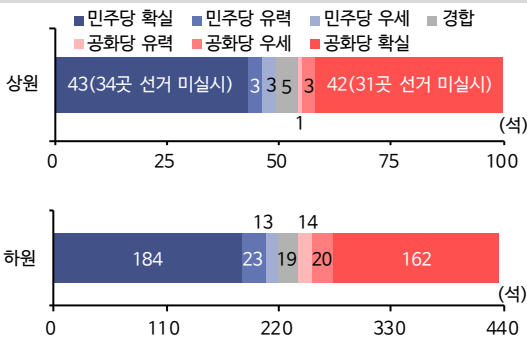
자료: Pew Research Center, 신한투자증권

이란전 장기화+물가 부담에 Trump 지지율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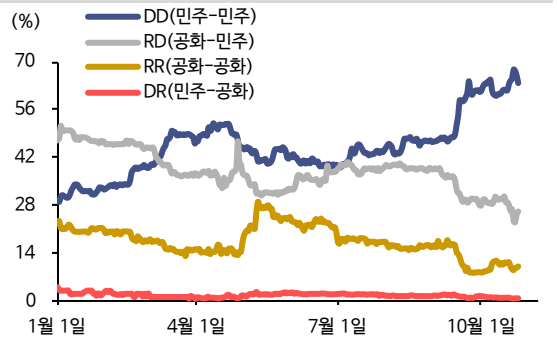
자료: YouGov, 신한투자증권

현재까지 흐름은 하원 민주당 우세, 상원 경합



자료: 270twin,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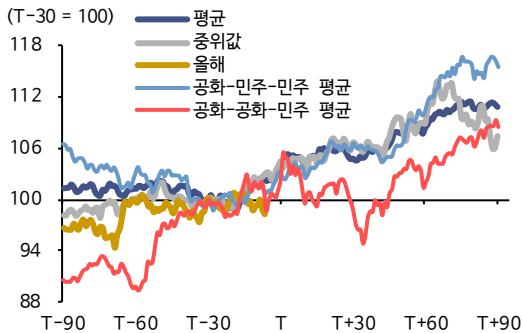
시장 민주당 하원 장악 92%, 상원 장악 62% 예측



자료: Kalshi, 신한투자증권 / 주: 상원-하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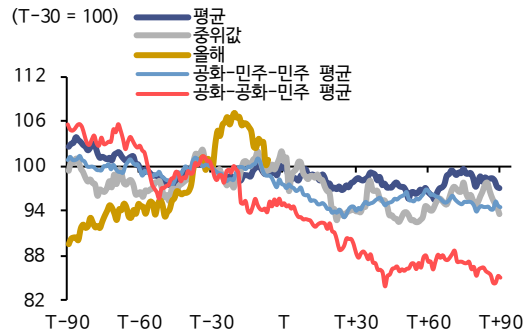
과거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은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다. 1970년 이후 14차례 S&P500 평균 상승률은 선거 후 3개월 6.3%, 6개월 13.1%였다. KOSPI도 각각 4.7%, 10.8% 올랐다. 특히 선거 전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정당 구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던 점에서 선거 결과보다 매크로·기업이익 등 시장 여건이 선거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다.

중간선거 전후 S&P500은 안도 랠리에 회복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중간선거 이후 美 10년물 금리는 진정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1970년대 이후 美 중간선거 결과와 주식시장 성과

선거일	대통령	정당구성			주가 상승률(S&P500, %)			주가 상승률(KOSPI, %)		
		대통령	상원	하원	1M	3M	6M	1M	3M	6M
1970-11-03	Nixon	공화	민주	민주	5.6	15.1	22.6			
1974-11-05	Ford	공화	민주	민주	(12.0)	5.1	19.9			
1978-11-07	Carter	민주	민주	민주	3.4	3.4	5.5			
1982-11-02	Reagan	공화	공화	민주	1.0	4.2	17.9			
1986-11-04	Reagan	공화	민주	민주	2.8	13.6	17.5			
1990-11-06	G.H.W. Bush	공화	민주	민주	5.6	14.9	22.0	2.1	(9.6)	(8.9)
1994-11-08	Clinton	민주	공화	공화	(4.3)	3.3	12.5	(7.4)	(15.8)	(20.1)
1998-11-03	Clinton	민주	공화	공화	3.5	14.5	21.9	9.9	35.7	85.6
2002-11-05	G.W. Bush	공화	공화	공화	(1.0)	(7.8)	1.2	8.7	(9.7)	(10.1)
2006-11-07	G.W. Bush	공화	민주	민주	1.8	4.9	9.0	1.6	2.8	14.2
2010-11-02	Obama	민주	민주	공화	2.3	9.3	14.0	1.7	8.0	16.2
2014-11-04	Obama	민주	공화	공화	3.0	1.5	5.1	2.7	1.4	10.2
2018-11-06	Trump	공화	공화	민주	(2.2)	(0.9)	6.4	(1.0)	5.4	5.1
2022-11-08	Biden	민주	민주	공화	3.5	7.6	8.1	(1.2)	3.5	4.8
평균(전체)					0.9	6.3	13.1	1.9	4.7	10.8
중위값(전체)					2.6	5.0	13.3	1.7	3.2	5.1
평균(Blue Wave: 공화-민주-민주)					0.8	10.7	18.2	1.9	(3.4)	2.7
평균(분리 정부: 공화-공화-민주)					(0.6)	1.7	12.2	(1.0)	5.4	5.1

자료: LSEG,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참고] 2018년 Trump 1기 중간선거 전후 정책환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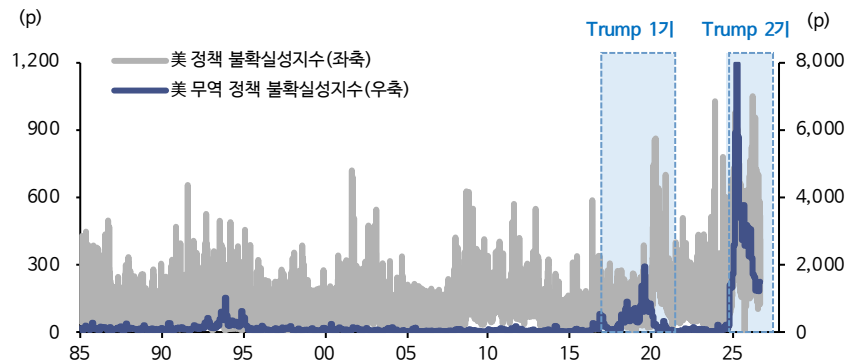
Trump 1기도 공화당 단점
정부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분점 정부화 → 입법 제약이
확대되면서 관세·행정명령
등 행정부 재량권 활용도
높아지며 정책 불확실성 ↑

지난 Trump 1기(2017~2021)에 치러진 2018 중간선거 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중간선거 이전은 이번 2기와 동일하게 공화당 단점 정부(공화-공화-공화)였다. 다만 중간선거 후 분점 정부(공화-공화-민주)화하며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

우선 당시 상하원 분리에 따라 입법 제약이 커졌고, 감세·이민·예산 등 주요 정책에서 의회 협상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mp의 관세·수출통제·국가비상사태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권의 재량 조치는 지속됐다. Huawei 제재 등 미중 기술 갈등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수출 환경에도 부담 요소였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말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35일 간 부분 섀다운 및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장기 섀다운의 정치·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며 예산 협상 필요성이 확대됐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부담감이 커지자 2019년 초당적 예산 합의가 이뤄졌다.

Trump 1·2기 모두 단점 → 분점 정부화 입법 제약 & 행정부 재량 → 불확실성↑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Trump 1기 중간선거 전후(공화-공화 → 공화-민주)

항목	정책	중간선거 이전(공화-공화)	중간선거 이후(공화-민주)
정치 환경	입법, 행정권	TCJA 등 대규모 입법 추진	행정부와 대립, 19년 말 탄핵조사 개시
재정 예산	감세안	17년 말 TCJA(10년간 1.5조\$ 감세) 통과	대규모 신규감세 입법 제약
	섀다운, 부채한도	18년 2월 부채한도 적용 유예	18년 말 35일 간 부분 섀다운 발생
산업 통상	행정부 독자 정책	주요 재정 및 세제정책의 입법 지원	19년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중국 관세	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에 301조 부과	19년 5월 관세율 조정, 9월 추가 관세 발효
국내 영향	기술 안보	18년 8월 외국인 투자심사법 통과	19년 5월 화웨이 제재 등 통제 강화
	반도체	미중 관세 갈등 및 중국 수요 둔화 우려	화웨이 제재와 기술 갈등으로 공급망 교란
	철강, 자동차	18년 철강 쿼터 적용, 자동차 관세 우려	철강 쿼터 지속, 자동차 관세 232조 우려
	공급망	미국 무역제재 및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19년 일본 수출규제 증첩되며 불확실성 ↑

자료: 신한투자증권

II. 정책 권한: 선거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의회 권력은 정책의 방향보다 실행 가능성을 바꾼다

정책 변화 가능성은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로 출발 →
어느 정당이 무엇을
선호하는가가 다음

정당 공약과 실제 정책 변화는 구분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 예산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부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중간선거 영향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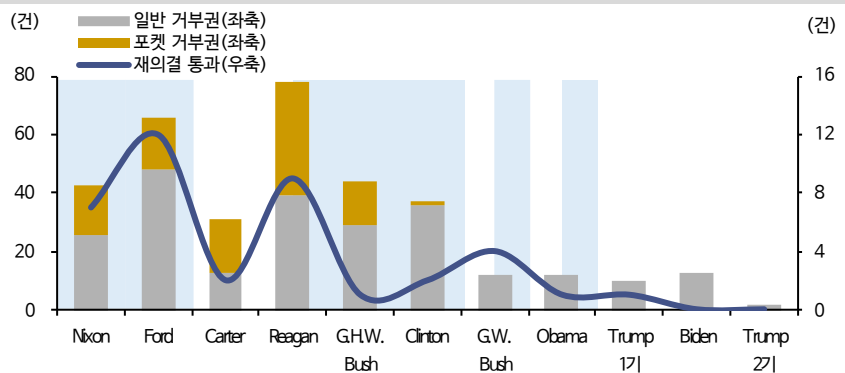
① 하원은 세입 법안의 발의와 정부 지출 관련 법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예산·재정의 협상력이 크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시 Trump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와 감세 연장, 부채한도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상원은 고위 공직자 인준, 조약 동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예산 조정 절차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하지만 주요 정책은 여전히 양당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 법안은 원칙적으로 토론 종결에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과반만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Trump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③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중요한 제약이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양원 각각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문턱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기존 정책을 일괄적으로 철회하는 것보다 예산·감독·인허가·집행 방식에 대한 견제와 일부 정책 수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별로 보면 ① 관세는 행정부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이다. 의회가 관련 법률을 수정하거나 행정부의 집행을 견제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기존 관세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② 세액공제·재정 지출은 법률과 예산에 연결되므로 의회 구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③ 규제는 법 개정 없이도 집행 우선순위나 감독 강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정당이 무엇을 선호하는가’보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간선거에 따른 상하원 구도가 중요한 이유다.

1970년대 이후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의회 재의결 통과 추이



자료: US Senate, 신한투자증권 / 주: 음영은 대통령과 상하원 모두 반대

① 대통령 행정권한 중심: 행정명령, 규제 집행 등 행정부 재량으로 정책 추진 여력↑ → 공화당 정책 어젠다에 집중

어젠다	초당적	공화당	민주당	선거 민감도
관세·무역 정책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견제, 전략 산업 보호, 공급망 회복력 확보	광범위한 관세와 상호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내 생산을 유도	동맹국 공조·전략품목 중심 보호무역, 中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강경 대응	중간~높음
에너지·석유·가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에너지 안보, 전력 수요 대응과 발전원 확충	석유·천연가스 생산 확대, 시추·파이프 라인 인허가 완화, LNG 수출 확대	재생에너지·배터리·전기차 투자 확대, 에너지 안정성을 위해 천연가스·원전 활용	높음
환경·기후 정책	환경재해 대응,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에너지 비용과 환경 편익의 균형	배출 규제·연비 기준 완화, 기업의 규제 비용 축소, 화석연료 개발 우선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발전·차량 배출 규제 강화	높음
외교·동맹	중국 견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기술·경제적 우위 유지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양자협상과 경제적 압박 활용	NATO 등 동맹과 다자협력을 통한 영향력 유지, 동맹 기반 대중국 견제	중간~높음
이민 정책	국경 관리, 이민제도의 실효성,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	불법 이민 단속·추방 강화, 국경장벽 확대, 망명 심사 강화	합법적 이민 경로와 인도적 보호 확대, 일부 체류자의 합법화 경로 및 이민자 권리 보호	매우 높음
금융·은행 규제	금융 안정, 예금자 보호, 신용 공급과 자본시장 경쟁력 유지	은행의 자본·유동성·준법 규제 부담 완화, 대출·투자와 핀테크 혁신 촉진	대형 금융기관 감독, 소비자 보호, 불공정 대출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중간~높음
노동·임금	숙련인력 확보, 생산성 향상,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 유연성, 인건비 부담 완화, 노조 영향력 제한. 민간 주도 인력 양성	노조 조직권·단체교섭권,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호 강화	높음
사회·문화 정책	법적 권리와 제도적 안정성 유지. 다만 핵심 쟁점의 실질적 초당적 합의 제한적	낙태 규제, 총기 소유권, 종교의 자유, 보수적 교육정책	낙태권 보장, 총기 규제,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 방지	높음

② 의회 입법·예산 중심: 법률 개정, 세제 변경 등 의회 입법·예산 권한이 중요 → 민주당 정책 어젠다에 집중

어젠다	초당적	공화당	민주당	선거 민감도
재정·정부 지출	국가부채·이자비용 관리, 국방·전략산업 투자, 재난 대응과 국가 핵심 기능 유지	비국방 재량지출과 연방정부 조직 축소, 국방·국경 지출 우선. 민간투자·규제 완화 통한 성장	인프라·교육·의료·기후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투자 통한 생산성·고용 개선	높음
조세 정책	기업 투자·고용 촉진, 중산층 부담 완화, 국제 조세경쟁력 유지	법인세·개인소득세 인하, 감세 연장,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사례: 2017년 TCJA의 법인세율 35% → 21% 인하	고소득층 대기업 증세, 중산층·저소득층 세액공제, 공공투자 재원 확보	매우 높음
헬스케어·의료보험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 접근성 개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장기 재정 안정성	민간보험 경쟁, 소비자 선택권, 가격 투명성 중시.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와 보장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회의적	ACA 기반 보험 보장, 공공지원, 처방약 가격 협상과 본인부담 경감. 사례: IRA의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 제도	높음
교육·학생부채	STEM 인재, 직업교육, 산업 현장과 교육의 연계 강화	학부도 선택권, 주·지방정부 권한, 직업교육 중시. 연방 개입과 광범위한 학자금 탕감 회의적	공교육 재정, 저소득층 접근성,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일부 채무 탕감 추진	중간~높음
주택·생활비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전력비·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	건축·인허가 규제 완화,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저소득층 주택지원, 임대료 보조, 공공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	중간
사회보장·고령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의 지속가능성, 고령층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	지출 구조 개혁과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보장·메디케어 수급자 보호를 중시	급여와 보장 수준 강화, 재원 확충 위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 선호	중간

③ 권한 결합형: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예산·법률은 실제 규모나 속도를 결정 → 초당적 정책 어젠다에 집중

어젠다	초당적	공화당	민주당	선거 민감도
AI·빅테크	미국의 AI 기술 패권, 컴퓨팅 인프라 확충, 생산성 향상과 국가안보 위험 관리	AI 사전 규제 축소, 민간 혁신과 상용화 속도,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선	AI 안전성·개인정보·알고리즘 차별·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강조	높음
국방·안보	군사적 억지력, 첨단 무기체계 현대화, 사이버 안보와 방산 생산능력 강화	국방력 증강, 미사일 방어, 군수산업 생산능력 확대, 국경 통제 강화	동맹 기반 억지력, 첨단 무기 투자, 정보 공유와 외교·안보 협력	중간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첨단기술의 해외 의존 축소, 미국 내 제조와 연구개발 기반 확보	미국 내 생산, 중국 견제에 적극적. 감세·규제 완화·무역조치를 상대적으로 선호	보조금·세액공제·R&D 지원을 통한 전략 산업 육성. 사례: CHIPS and Science Act	중간
전력망·데이터센터	AI·첨단 제조업을 위한 전력·송전망 확충과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발전·송전·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전력 공급 확대, 민간투자 촉진	청정전력과 전력망 투자,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 관리	높음
핵심 광물·배터리	리튬·흑연·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다변화	국내 채굴·정제, 인허가 완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치로 공급망 강화	배터리·전기차·청정기술 투자와 원산지·공급망 요건 통한 국내·우방국 생산 확대	중간~높음
원전·차세대 에너지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과 에너지 안보,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및 차세대 기술 개발	원전 건설·인허가 간소화, 기존 원전 유지, SMR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을 청정전력의 일부로 활용하면서 안전 규제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결합	낮음~중간

자료: 신한투자증권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전달되는 세 가지 경로인
① 관세 ② 재정 ③ 규제가 상호 충돌하며
미국 성장모델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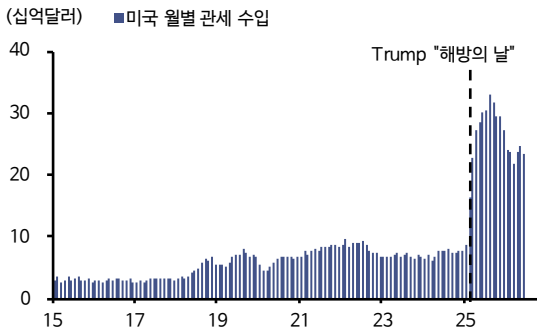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전달되는 세 가지 경로: ① 관세·전쟁 ② 재정 ③ 규제

앞서 세 경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관세는 물가와 기업 원가에 영향을 주며 물가 부담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예산 협상은 세제 지원·규제 집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는 AI 투자, 전력망 확충의 속도를 바꾼다. 이번 중간선거의 중요성은 개별 정책 하나보다 이들 정책이 맞물리는 과정에 있다.

① 관세·전쟁: 관세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고 행정부 재량 여지가 큰 만큼 선거 결과가 불리할수록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 재량적 정책의 확대는 예측가능성 저하와 불확실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관세의 전면 철회보다 추가 관세 도입 제약, 적용 범위와 예외, 통관 규정의 집행 강도 변화에 주목한다. 1) 기업의 가격 전가 가능성, 2) 미국 내 생산 전환 가능성에 따라 실적 영향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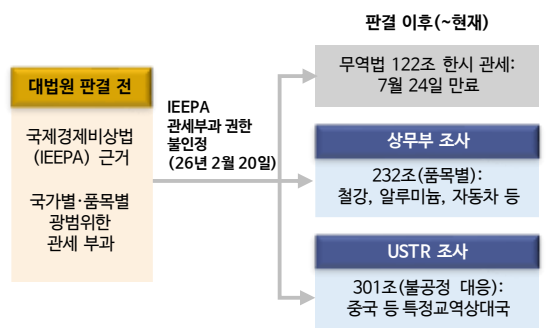
외교·안보 정책도 의회 구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의 외교·군사적 권한과 초당적 제재 지지를 고려하면 중간선거만으로 대외 정책이 일괄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대러 제재, 중동 군사 작전 등은 의회 예산 승인·감독, 제재 입법, 청문회와 조사권 등으로 견제받을 수 있다. 지정학적 충돌의 강도·빈도가 떨어지면 공급망 교란 압력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25년 Trump 관세 정책 이후 美 관세 수입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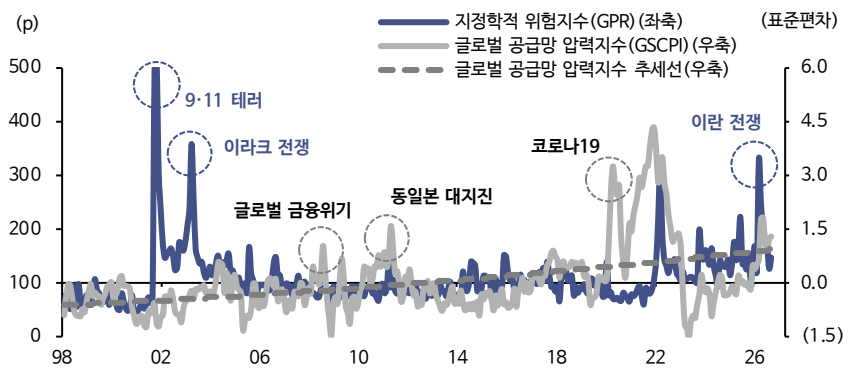
자료: 미국 재무부, 신한투자증권

IEEPA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정책 구조 복잡화



자료: 신한투자증권

선거 이후 지정학 이벤트 모멘텀↓ → 충돌 강도·빈도↓ → 공급망 압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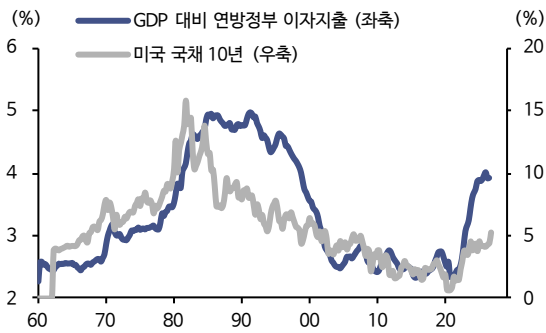
자료: Caldara and Iacoviello,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간선거 이후 재정정책 변화는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보다 신규 지출 확대 여부, 세제 지원 연장·수정, 예산 집행 속도 등

② **재정과 예산:** 정부 수요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다. 미국 GDP 대비 연방정부 이자지출 비중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상승했고, 연방정부 부채도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부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경기 부양과 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제약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I·반도체·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지원 필요성이 유지되더라도,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세제 혜택의 적용 조건 등을 둘러싼 정치적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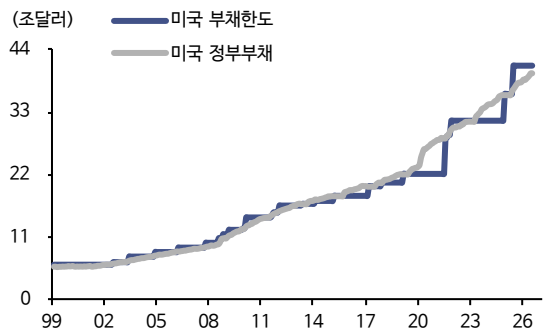
신규 지출과 세제 혜택은 의회의 입법·예산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업은 별도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 후 재정정책 변화는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보다 신규 지출의 확대 여부와 세제 지원의 연장·수정, 예산 집행 속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할정부가 형성되면 양당 간 우선순위 차이로 예산 합의가 지연되고 정부 셋다운이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2020년대 들어 이자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연방 정부부채 곧 한도에 도달 → 셋다운 리스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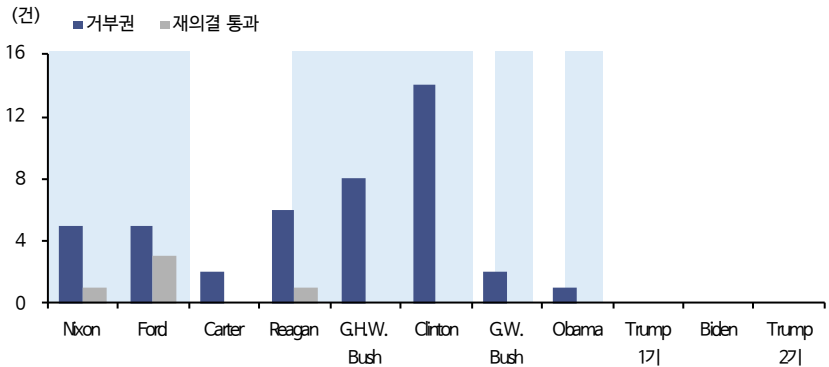
분할정부가 형성 시 양당 간 우선순위 차이로 예산 합의가 지연되고, 정부 셋다운,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 다만, 곧바로 주식시장 하락 신호라기보다 협상 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의 변동을 지켜볼 필요

다만 셋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경기침체나 주식시장 하락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셋다운의 지속 기간과 당시의 경제·시장 환경에 따라 주가 반응이 달랐으며, 셋다운 발생 사실만으로 일관된 시장 방향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예산 협상 지연이 단기에 그치고 핵심 정부 기능과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충격도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셋다운이 장기화되거나 부채한도 협상과 맞물려 정부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면 정책 불확실성과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셋다운의 발생 여부보다는 지속 기간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사전 예상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중간선거 이후 재정정책의 핵심 변수 역시 단순한 정부 지출 확대·축소가 아니라,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서 전략 산업 지원과 재정 건전성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있다. 이는 정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뿐 아니라, 세액공제와 보조금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반도체·에너지·배터리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美 세출 법안 거부권 행사 사례



자료: US Senate, 신한투자증권 / 주: 음영은 대통령과 상하원 모두 반대

1970년대 이후 美 섀다운 발생 사례 및 주식시장 성과 추이

날짜	대통령	의회 구도		지속 기간 (일)	주가 상승률(S&P500, %)				주가 상승률(KOSPI, %)			
		상원	하원		섀다운 中	1M	3M	6M	섀다운 中	1M	3M	6M
1981-11-20	Reagan	공화	민주	2	(0.1)	1.3	(7.0)	(5.6)				
1990-10-06	G.H.W. Bush	민주	민주	3	(2.1)	0.0	3.0	20.5	(0.4)	14.0	13.3	5.6
1995-11-14	Clinton	공화	공화	5	1.8	4.7	11.2	12.9	(0.2)	(4.2)	(8.3)	1.7
1995-12-16	Clinton	공화	공화	21	0.1	(1.3)	4.1	8.0	(2.9)	(1.8)	(3.1)	(2.8)
2013-10-01	Obama	민주	공화	16	2.3	3.9	9.0	11.2	2.1	2.0	0.6	(0.3)
2018-01-20	Trump	공화	공화	2	0.8	(3.3)	(5.0)	(0.3)	(0.7)	(4.2)	(1.7)	(9.2)
2018-12-22	Trump	공화	공화	34	10.3	8.9	15.9	22.1	5.6	2.7	6.1	3.1
2025-10-01	Trump	공화	공화	42	2.1	1.9	2.0	(2.0)	20.1	18.9	21.9	58.5
2026-01-31	Trump	공화	공화	(부분)3	(0.3)	(0.9)	3.9	7.9	1.2	19.5	26.3	26.2
2026-02-14	Trump	공화	공화	(부분)75	5.5	(3.0)	9.7	13.9	19.8	(0.4)	44.9	26.7
평균				20.3	2.0	1.2	4.7	8.9	5.0	5.2	11.1	12.2
중위값				10.5	1.3	0.7	4.0	9.6	1.2	2.0	6.1	3.1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지속 기간 2일 미만은 제외

규제 이슈에서 가장 시장
관심도 높은 데이터센터.
의회 결과보다는 주지사
선거 결과 등 지역 문제

③ **규제**: 규제는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낸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공급의 속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빅테크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화 등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신규 공급이 제한된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부지 확보 여부, 설비 가동률, 전력비 부담, 고객 수요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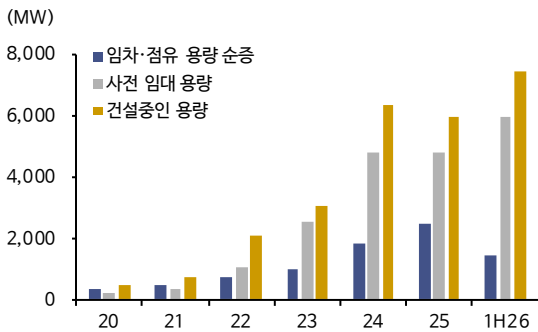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의회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도 함께 실시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투자 확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며 전력망 부담, 환경 문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미 데이터센터의 건설 중인 용량은 2020년 약 0.5GW에서 2026년 상반기 약 7.5GW로 15배 확대됐다. 반면 신규 임차·점유 용량 순증은 2025년 약 2.5GW에서 2026년 상반기 약 1.5GW로 둔화됐다. 이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는 2025년 약 20건에서 2026년 4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규모로 약 1,300억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규제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New York은 신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환경 인허가를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했고, Texas는 전력망 부담 점검을 위한 허가 제한에 나섰다. Pennsylvania주 역시 전력요금 부담과 환경보호 관련 인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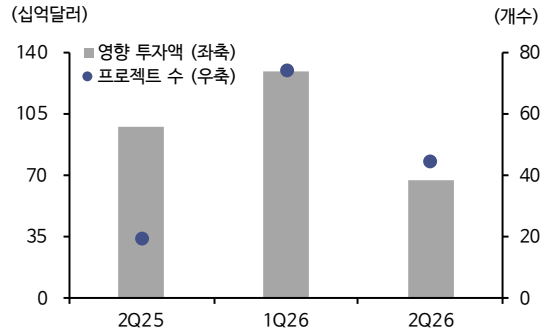
중간선거 후 주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허가 속도와 투자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규제 강화는 AI 수요 훼손보다 데이터센터 착공 및 가동 지연을 거치며, 발표된 투자 계획과 실제 Capex 집행 간 시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투자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정부의 광역 규제가 확대될 경우 투자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미 데이터센터 증설 추이



자료: CBRE, 신한투자증권
주: '임차·점유 용량 순증'은 'Net absorption'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사업 차질 현황



자료: Data Center Watch, 신한투자증권
주: 분기별 관측 프로젝트 투자액 추이, 중단과 지연을 합친 값

주정부 차원의 주요 규제·인허가 차질 사례

주(州)	조치	규제 유형	실질적 영향
New York	7/14 행정명령 62호 발동	주 전체 인허가 유예	신규 대규모 DC 환경 인허가를 최대 1년간 유예 → 일정 지연
Texas	9/21 주지사 지시 발표	주정부 허가 중단	전력망 영향 점검 위한 조사 완료 전 신규 DC 허가 발급 중단
Pennsylvania	8/18 행정명령 5호	인허가 요건 강화	개발사 GRID 요건 약속+지방정 부 승인 → 주정부 인허가 심사
Illinois	7/1 세제 인센티브 처리 중단	투자 유인 축소	주정부의 DC 세제 지원 프로그램 신규 신청 처리 중단
Maine	4월 법안 통과 주지사 거부권	법안 무산	20MW 이상 DC 신규 인허가 제한(~27년 11월) 법안 무산

자료: 신한투자증권

데이터센터 개수 상위 지역의 주지사 지지 추이

주(州)	DC 개수 (개)	현재 주지사	전망
Virginia	674	민주	선거 미 실시
Texas	537	공화	공화
California	296	민주	민주
Georgia	276	공화	민주
Illinois	242	민주	민주
Ohio	240	공화	민주
Pennsylvania	174	민주	민주
Arizona	160	민주	민주

자료: Kalshi, Data Center Map, 신한투자증권

III. 정책 충돌: 정책 간 긴장 미국 성장모델 제약

① AI Capex: AI 패권 경쟁 vs 전력·인프라 비용의 충돌

AI 경쟁력 확보는 미국의
초당적 목표. 반면 DC가
초래하는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속도 조절 요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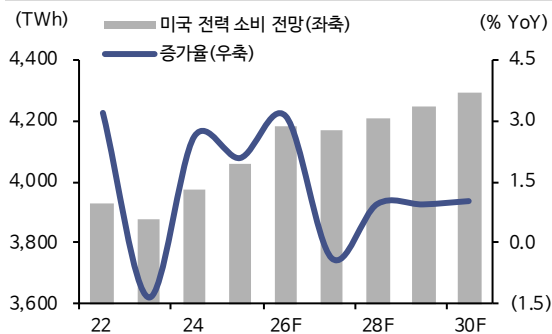
미국의 AI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목표로 자리 잡은 만큼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AI Capex 사이클 자체가 단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AI 투자는 새로운 정치적 비용을 만든다.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용수, 부지, 송전망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전력망 확충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가져오는 고용이나 세수를 넘어 생활비 상승과 환경 부담이라는 청구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긴장은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9월 미국 하원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법안이 417:3으로 통과됐다. 이는 데이터센터 확대의 필요성과 별개로 데이터센터의 확장을 둘러싼 우려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Trump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지만 업계 자율 방침에 법적 강제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갈등 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AI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만큼이나 데이터센터가 초래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초당적이다. 따라서 의회 구도 변화는 AI 수요를 꺾기보다는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비용 부담, 에너지 관련 지원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의 인허가가 지연되고 전력 확보 비용이 증가하면, 이미 전력과 부지, GPU를 확보한 사업자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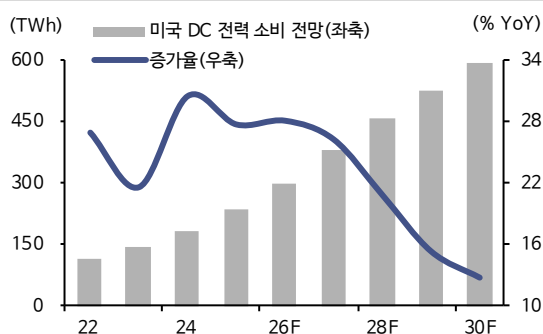
AI Capex는 반도체-전력 인프라에 공통 수요 동력으로 작용하나, 실적에 전달되는 경로·시점은 다를 수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되면 반도체 주문·출하뿐 아니라 신규 전력 설비 수요도 영향을 받는다. 다만 전력기기는 송전망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데이터센터 건설 외 수요 요인도 보유한다. 반면 AI 반도체는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연산 수요, 재고·가격 변화에 따라 실적 전망이 달라진다. 따라서 1)AI Capex라는 공통 동력 관련 노출도와 2) 데이터센터 외 수요 기반, 실적 반영 시점 등 차이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이후 전력 소비 증가 속도는 둔화



자료: EIA, 신한투자증권

美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증가를 피크 통과 전망



자료: EPRI, 신한투자증권

② 관세·대중 규제: 미국 제조업 보호 vs 기업 비용·소비자 물가의 충돌

관세·규제 통한 산업 보호
편익-비용 주체별로 상이
→ 실질적 영향은 명목상
대상이 아닌 '생산구조'와
'가격 전가력'에 의존

관세는 Trump 행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이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수입 억제에 그치지 않는다. 관세를 통한 현지 생산 유인은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의회 구도가 달라져도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전략산업의 공급망 안보라는 목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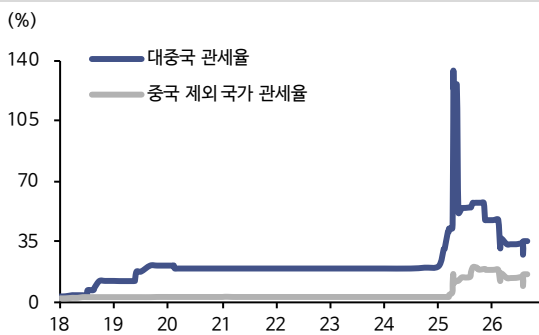
그러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기업의 원가를 높이고, 현지 생산 확대 역시 설비 투자와 인건비, 공급망 재편 비용을 수반한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가 반드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기업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 구도에 따라 관세의 적용 범위와 예외, 집행 방식에 대한 견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전략적 공급망 확보라는 목표가 전면적으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정당 간 공통분모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관세·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의 편익-비용이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① 미국 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은 관세 부담을 줄이거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거나 생산지를 단기간에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은 원가 상승에 노출될 수 있다. ② 기업이 관세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격 인상이 어려우면 기업의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 결국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정책의 명목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구조'와 '가격 전가력'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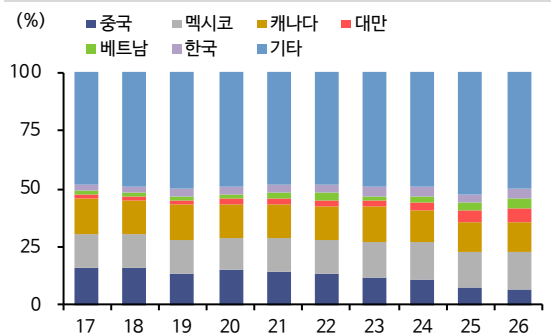
미국 산업 보호 정책은 한국에 일률적인 호재나 악재라기보다, '현지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 vs '투자 수익' 간 격차를 통해 경쟁력이 차별화된다. 미국 현지 생산은 관세 부담을 낮추지만, 신규 공장 건설과 공급망 구축에는 상당한 자본·시간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보한 기업은 접근성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불확실한 수요 상황에서 현지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고정비·감가상각비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를 변화뿐 아니라 미국 투자계획, 현지 가동률, 투자에 따른 자본수익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 시기에도 유지된 대중국 고관세율



자료: PIIE, 신한투자증권

미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크게 축소



자료: US Census Bureau, 신한투자증권 / 주: 26년은 8월까지

미국은 AI·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도 관리

→ 중간선거로 구성되는 의회 우선순위 따라 지원 규모·조건·속도 등 결정

③ 재정 우선순위: 전략산업 지원 vs 재정 여력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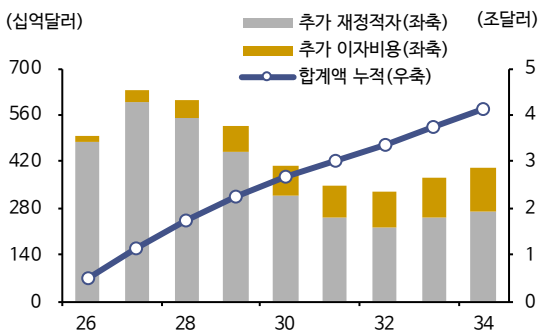
미국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 부채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 전략산업 지원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보조금과 정부 지출은 재정 여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적 필요성이 유지되더라도 지원 규모·조건·속도 등은 중간선거 결과 구성되는 의회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분할정부가 형성되면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요구와 재정 부담을 억제하려는 요구가 충돌할 경우,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보다 신규 지원의 제한이나 세제 혜택 조건 조정, 예산 집행 지연 등 형태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존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인 지원이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약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와 보조금이 사업 경제성의 중요한 전제인 경우에는 지원의 적용 조건과 지속 가능성이 투자 회수 기간을 좌우할 수 있다(재생에너지·배터리·ESS 등). 반면 정책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구조적 수요와 자체적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은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 같은 산업에 속하더라도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현금흐름 구조에 따라 정책 변화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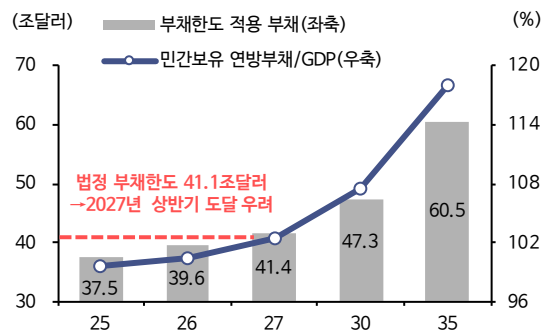
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경우 주목할 변수는 지원의 총량뿐 아니라 산업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더라도, ① 안보, 공급망 자립에 직결되는 분야와 ② 민간 투자만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야 사이에서 지원 방식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재정 여건에서 어떤 산업이 상대적으로 우선 정부 지원을 받고, 어떤 산업이 민간 자본 조달과 자체 수익성에 더 의존하게 되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예산 우선순위와 세제 정책 변화를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BBBA 법안 통과로 추가된 미국 재정적자 규모



자료: CBO,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2027년에는 법정 부채한도 증액 협상 필요



자료: CBO, 신한투자증권 / 주: 매년 9월말 예상 수치

IV. 주식시장: 정책의 변화와 이익의 차별화

정책 변화는 어떻게 기업 실적과 주가를 가르는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정책 변화가 이익&멀티플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필요

→ ① 정책 수혜와 주가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② 기업 간 경쟁 구도와 자본 배분의 변화에 따라 산업 전체의 수혜 여부보다 기업 간 차별화로 나타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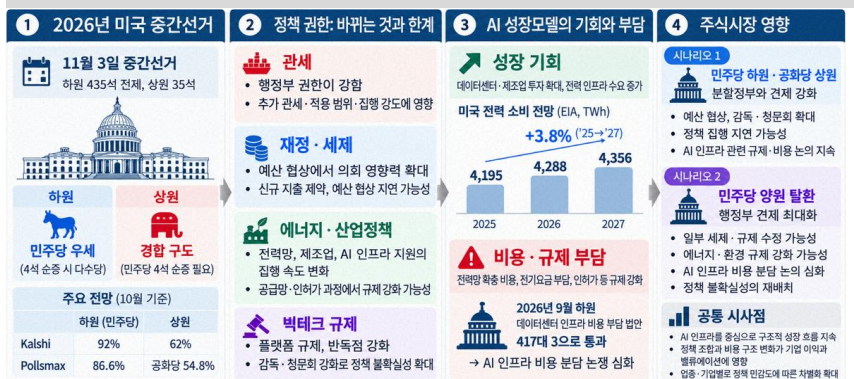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정책적 긴장은 공통적으로 미국 성장전략이 유지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비용과 제약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① AI Capex 확대는 전력·인프라 비용 분담과 수익성 문제를 동반하고, ② 관세·규제 등 통한 제조업 보호는 공급망 안보와 기업 원가 사이의 상충관계를 만든다. ③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재정 여력과 의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중간 선거는 이러한 구조적 목표를 뒤집기보다 정책의 집행 속도와 비용 부담, 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기업의 이익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① 이익 경로에서는 정책이 매출·원가·Capex·ROIC을 변화시키며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준다. ② 밸류에이션 경로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성장 기대와 위험 프리미엄 변화가 투자자가 지불하려는 멀티플에 영향을 미친다. 두 경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AI Capex 확대가 지속되더라도 전력 확보 비용과 자금조달 부담이 커져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관련 기업의 매출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수혜 여부와 주가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2027년 주식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① 정책 변화가 실제 투자와 비용에 반영되는지, ② 그 변화가 이익 추정치의 상·하향으로 이어지는지, ③ 현재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중간선거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변화시키는 경로다.

정책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별로 다르다. 현지 생산 기반, 전력 확보 능력, 정책 지원 의존도에 따라 동일한 비용 충격에도 이익 훼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업종 전체의 정책 수혜 여부보다는 기업별 이익 추정치 변화가 실제로 차별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적 시즌을 거치며 검증될 영역이다.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2027 주식시장 영향 구조도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간선거 이후, AI Capex 확대에서 수익성 검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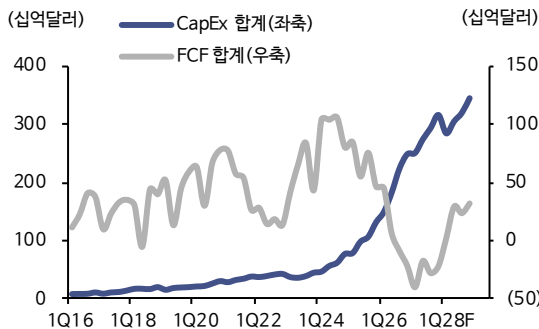
칩 제약, 자본 제약 외에
주민 반발과 같은 '수용성
제약'은 밸류에이션 경로
통해 AI 종목들의 추가적
조정 빌미로 작용 여지

중간선거 결과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AI Capex다. 의회 구도 변화가 정책 집행의 속도와 비용 부담을 바꾸면, 이미 진행 중인 AI 사이클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는 AI 수요의 지속 여부뿐 아니라 막대한 Capex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익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금조달이 중요해지고 있다. 선거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최근 미국 장기 금리의 하락에도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신용 위험이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악재였다. 즉, 금리 하락이 반드시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며, 하락의 배경이 AI Capex 둔화나 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라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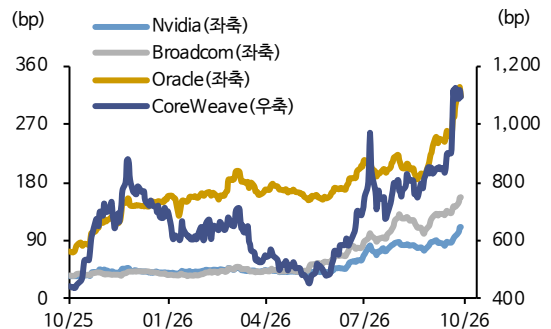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력 비용 부담 등 주민 반발이 이어질 경우 일부 프로젝트 착공·가동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AI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투자 일정의 늦어지면서 반도체·네트워크·전력 설비의 수요 실현이 뒤로 밀리게 되고, 차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금융비용과 현금흐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용성 제약'이 자본 제약을 심화시켜 AI주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빅테크, Capex를 정당화하는 수익성 증명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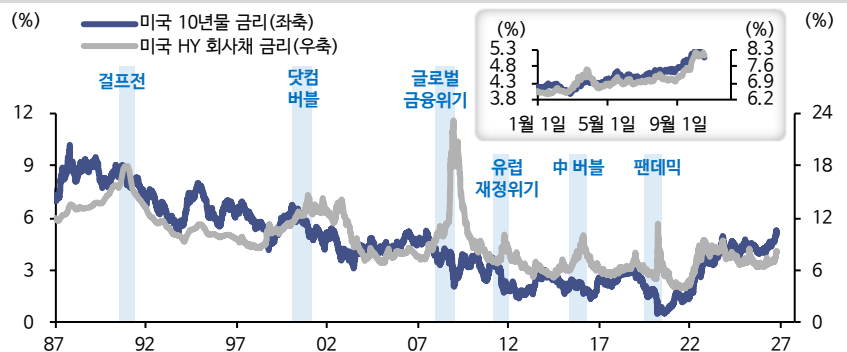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MSFT·AMZN·GOOGL·META·ORCL

약한 고리인 네오클라우드 등 자본 제약 관찰 필요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기업별 5Y CDS Spread

신용 우려 등 안전자산 선호 시 국채 금리 하락&HY 금리 상승 동반



자료: LSEG, Macrotrends, 신한투자증권

HW→SW보다는 Capex→수익성&현금창출력

AI 사이클 상에서 Capex
확대 영향 중목 →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보유 종목으로 관심이
점차 이동

이러한 환경에서는 AI 밸류체인 내에서도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AI 사이클 상에서 GPU·메모리·네트워크 장비와 전력 인프라 등 Capex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영역이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질 수 있다.

클라우드·AI 플랫폼은 기업 고객 도입이 유료 사용량과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매출 증가가 추론 비용, 모델 개발비를 웃도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기업 역시 AI 기능이 고객의 지불 의사와 사용 빈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의 생산성과 마진을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한 매출 성장보다 비용을 차감한 뒤에도 수익성이 개선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HW에서 SW로 일방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플랫폼의 수익화가 확인되면 AI Capex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반도체와 인프라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익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Capex 속도 조절이 나오면 그 영향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정책 변화가 투자 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 AI 투자의 매출·현금흐름 전환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거 결과가 정책 실행의 조건을 바꾼다면 시장의 다음 시험대는 그 조건 아래에서도 AI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적 시즌에서 검증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2027년 AI 수익화(플랫폼·AI 어플리케이션) 주목 가운데 정책 민감도 따른 미국 중목 분포

	전력·그리드	반도체·컴퓨터	데이터센터·인프라	AI 플랫폼·모델	애플리케이션·수익화
Blue Wave 영향 가능성	· NextEra Energy (재생에너지/ ESS 자원)				· Veeva (디지털 생명과학 지원) · Tempus AI (정밀의료 접근성)
초당적·구조적 영향 전망 (정책 영향!)	· GE Vernova (전력망 현대화) · Eaton (전력 안정성 투자) · Quanta Services (송배전 인프라 확충)	· Nvidia (AI 주도권 경쟁) · Broadcom (AI 인프라 육성) · Micron (메모리 공급망 자원) · TSMC+ASML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 Vertiv (냉각·설비 등 인프라) · Equinix (AI 서버 설치 확대) · Digital Realty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 Arista Networks (고속 네트워크 투자)	· Microsoft (공공·기업 AI 도입) · Alphabet (AI 전반 수요 확대) · Amazon (AWS 클라우드 수요) · Snowflake (AI 데이터 활용)	· ServiceNow+ Salesforce (기업 업무 효율화) · Oracle (클라우드 수요 확대) · Meta (AI 생태계 확대)
공화당 정책 영향 가능성	· Constellation Energy (원자력 발전 확대)			· Palantir (국방·경보 AI 수요)	· Tesla+SpaceX (자율주행 규제 완화 +우주안보 투자 기대)

AI 밸류체인 단계(좌 → 우: AI 연산 기반에서 최종 서비스·활용으로)

자료: 신한투자증권

V. 한국 주식시장: 정책 수혜를 넘어 이익의 지속성으로

미국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실적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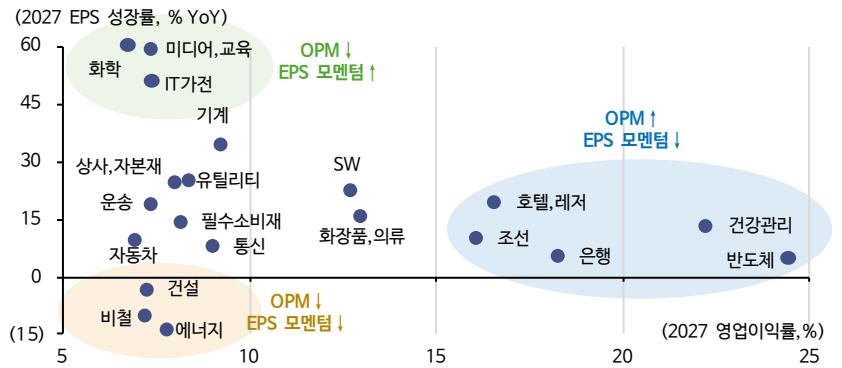
AI 인프라 관련주는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에 연동. 관세·규제 여파는
① 비용 흡수 여력 ② 재무 구조 등 통한 선별 필요

→ 반도체·조선·헬스케어 중심 高마진·低부채비율. 배터리 이익 성장세 부각

미국 중간선거 영향은 정책 수혜 여부보다 정책 변화가 국내 기업 이익과 투자 효율성에 미칠 영향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① AI Capex와 데이터센터 건설은 반도체·전력 인프라의 수요를 뒷받침하나 투자 집행 시점과 제품별 투자 배분에 따라 실적 반영 시차는 다를 수 있다. ② 관세·현지화 정책은 미국 매출 기회와 함께 생산비용·고정비 부담을 변화시키며 ③ 전략산업 지원은 기업 투자 경제성과 자금조달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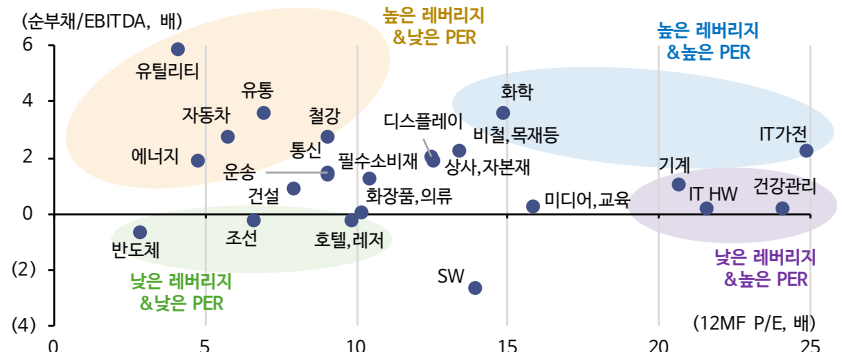
따라서 2027년 한국 업종 전략에서는 정책 노출도뿐 아니라 이익 추정치의 상향 여력, 비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구조, 추가 투자에 대한 수익성(ROIC), 현재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기대 수준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혜가 예상되더라도 이익에 반영이 지연되면 멀티플이 할인될 수 있고,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된 업종은 상대수익률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후 정책 제약 확대에도 이익 성장 및 마진(비용 흡수 여력) 우수 업종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비용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무구조와 밸류에이션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①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과 실현 시점의 차이

AI 인프라는 산업의 장기 성장성뿐 아니라 투자가 실제 발주·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주가 차별화 핵심 변수

→ 칩·자본·수용성 제약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미국 AI Capex가 지속되는지뿐 아니라 투자 구성과 집행 일정도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반도체·메모리·네트워크 장비와 전력기기 등 인프라 공급 기업의 수요 기반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전력 비용과 인허가, 지역사회의 반발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AI 수요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관련 장비의 발주와 매출 인식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최근 AI 자본 제약과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의 조정을 유발했듯, 취약한 시장 심리 하에서 ‘수용성 제약’도 비슷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미국 빅테크의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자금이 GPU·메모리·네트워크 등 어떤 분야에 배분되는지, 실제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투자 지속성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반도체 양사의 12MF PER이 3배 내외 수준으로 낮은 데는 이익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EPS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현재의 마진이 유지될 수 있는지와 2)메모리 공급 확대에도 수익성이 지속될지를 검증하고 있다.

관건은 빅테크의 AI Capex 가이드라인 확대 자체보다 수익이 확인되는지에 있다. 클라우드·AI 서비스 매출 성장과 수익화가 Capex를 정당화하고, 현금흐름·자금 조달 여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SpaceX·Meta의 실적 발표 후 시장 반응 역시 Capex 규모뿐 아니라 자본 제약과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검증을 거쳐 Capex 지속성 우려가 완화되고 메모리 수급·이익 전망이 뒷받침되면 주가 재평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2027년 AI 수익화(플랫폼·AI 어플리케이션) 주목 가운데 정책 민감도 따른 한국 종목 분포

	전력·그리드	반도체·컴퓨터	데이터센터·인프라	AI 플랫폼·모델	애플리케이션·수익화
Blue Wave 영향 가능성	· SK이터닉스 · HD현대에너지솔루션 · 씨에스원드 (신재생에너지 자원)				· 씨어스+로켓헬스케어 · 쓰리밀리언+셀바스AI (의료AI 자원 확대)
초당적·구조적 영향 전망 (정책 영향!)	· HD현대일렉트릭 · LS ELECTRIC · 효성중공업 (전력망 교체 +데이터센터 수요)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 수요 증가) · DB이텍 (반도체 생산/반 육성) · 한미반도체+리노공업 · 원익FS ·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설비투자 자원)	· 삼성SDS+LG CNS (공공/정부 AX) · SK텔레콤+NAVER (데이터센터 투자) · SFA (물류 자동화 솔루션)	· NAVER+카카오 (AI 서비스 전반) · KT+SK텔레콤 (AI 플랫폼/통신) · 솔트룩스 (기업/공공 부문 AI 활용 자원)	· 더존비즈온 (기업 AX+생산성 자원) · 알체라 (사이버 보안 등 분야 비전 AI 적용) · 코난테크놀로지 (공공 AI 솔루션 제공)
공화당 정책 영향 가능성	· 두산에너지빌리티 · 현대건설+한전KPS (원전 등 발전설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현대로템 (방산 수요 증가)

AI 밸류체인 단계(좌 → 우: AI 연산 기반에서 최종 서비스·활용으로)

자료: 신한투자증권

AI·변압기 등 초당적인
여젠다도 속도 조절 가능

조선·방산은 민주당 주도
의회 下 집행조건 변경 ↑

자동차·산업기계·로봇 등
관세·현지화 불확실성 ↑

② 제조업 보호와 ③ 전략산업 지원: 비용 및 수익성의 차이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은 한국 기업에 일률적인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기보다 현지 생산 구조와 추가 투자 부담에 따라 영향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미국 현지 생산은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② 공장 건설과 현지 공급망 구축에 따른 고정비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배터리 등 미국 생산·공급망 정책에 민감한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과 공장 가동률, 세제 혜택·보조금의 적용 조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 지원도 정책 수혜 여부와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산업별 투자 환경과 자금 조달 여건이 변화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기업별로 지원 의존도와 추가 투자 부담, 자체 현금창출 능력을 비교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Blue Wave 시나리오에서는 업종별 정책 경로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은 관세 인상과 현지 생산 요구에 따른 마진 압박이, 철강·알루미늄은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현지 생산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변화가 핵심이다. 반도체는 보조금·세제지원 조정과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배터리·소재는 중국산 공급망 규제와 원산지 요건 변화가 투자 및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전력기기는 인허가와 주민 반발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조선·방산은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계약·예산 집행 조건의 변화가 주요 변수다.

미국 중간선거 Blue Wave 가정 시 한국 주요 산업별 리스크와 영향

산업	주요 통상 환경	분점 정부 시 리스크	국내 산업 영향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현지 생산 확대 요구	기존 관세 부담 지속 현지 투자조건 변화 우려	한국에서 생산하는 수출 기업은 관세와 원산지 부담에 이중 노출
철강, 알루미늄	232조 관세 미국산 조달 확대 요구	관세 완화 가능성 제한 추가 품목 규제 우려	美 현지 생산시설 확보 기업에 이점
반도체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CHIPS Act 지원	보조금·세제지원조건 조정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가능성	AI 메모리 수요가 굳건하더라도 미국 정책지원 불확실성 노출
배터리, 소재	중국산 공급망 규제	기존 세액공제, 지원조건 변경 중국산 원료 규제 강화 부담	소재기업들의 공급망 재편비용 확대
전력기기	AI 데이터센터 확장 전력설비 수요 확대	송전망 인허가 비용 부담 전력망 투자 지연 가능성	변압기 등 수요 견조하겠으나 프로젝트 발주 및 집행일정 변동 우려
에너지, 원전	에너지 안보 및 美 생산 확대	에너지 믹스 변화 가능성 인허가 및 예산 협상 지연	원전, LNG 등 수주 기회가 확대되나 보조금 수위 및 지원금 불확실성
조선, 방산	美 국방력 강화 연계	美 조선 협력 기회가 지속되나 사업별 집행조건 변경	美 조선업 협력 기회 확대 vs. 사업승인 및 계약조건 변동 우려
산업기계, 로봇	232조 추가 적용 대상	품목관세 조정 우려	관세 및 현지화 비용 불확실성 고조

자료: 신한투자증권

미 중간선거 결과 자체는
증시 방향 결정 요소 X

정책 제약 확대 상황에서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과
비용 부담을 수익성으로
흡수 가능한 기업을 선별

VI. 결론: 선거 결과보다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익 지속성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Trump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이벤트다. 그러나 선거 결과만으로 2027년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의회 탈환은 행정부 견제와 일부 정책 수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기존 법률, 초당적 정책 목표가 유지되는 영역들도 존재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점이 나오더라도 전기요금 부담과 지역사회의 반발, 재정과 예산 문제는 정책의 집행 방식을 바꿀 것이다.

① AI Capex 사이클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교차하는 중심축이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전력 인프라 수요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전력망과 지역사회 비용 부담, 인허가와 규제 문제를 만든다. ② 관세와 산업 정책은 미국 내 생산,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기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③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패권 유지라는 초당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과 의회 구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규모·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27년 투자전략 핵심은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지를 맞히는 데 있지 않다. 중간선거는 기존 성장모델을 둘러싼 정책 제약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계기다. 2027년 주식시장의 핵심은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라,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도 AI 기업이 Capex를 지속하고 이를 실제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다. ① 미국 AI Capex가 지속되더라도 투자 구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에 따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기업의 수혜 시점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② 제조업 보호 정책 역시 미국 현지 생산 기반과 추가 투자 부담에 따라 기업별 경쟁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전력기기는 수주잔고 매출 전환과 수익성, 자동차-배터리는 현지 생산 비용과 정책 지원 조건을 핵심 판단 변수로 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정책 제약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 비용을 수익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

업종별 美 중간선거 Blue Wave 영향 Comment				
업종명	Blue Wave 기상도	영향 강도	영향 시점	주요 내용
반도체		보통	중기	· 민주당 영향력 강화 시 Trump 행정부 투자/관세 정책 견제로 현지 생산 또는 관세 변수 확대 가능성 ·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 비용을 수요자에 부담시킬 경우 데이터센터 경제성 악화 우려 존재 · 공화당 강경파 영향력 강화 시 국내 메모리 2사의 中 반도체 Fab 장비 통제 강화로 공정 전환 차질 가능 · CHIPS Act는 초당적 목표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조선		보통	중기	· Blue Wave 시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기조 강화, MASGA 신조 기대 약화 · 조선업 재건은 초당적 어젠다, 301조 中 선박 입항료·MASGA 투자는 행정부 권한으로 유지 · 특수선 직접 수주 기대 후퇴, 기회는 MRO·블록 공급·현지 조선소로 압축
방산/기계		보통	단기	· 국방예산 1.5조달러 중 예산조정 3,500억\$ 차단→골든돔 등 Trump 신규사업 지연 리스크 · 탄약, 미사일 보충,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는 초당적, 232조 관세는 행정부 권한으로 유지 · 국내 방산 美 예산 직접 노출 1% 미만이나 피어 멀티플 하락 부담. 전력기기 중립·공정, 건설장비 중립
건설		보통	중기	· 美 신규원전 건설 및 대미투자 사업은 큰 틀에서 유지 · Blue Wave 시 정부 금융지원 규모 및 조건 등에 대한 감축 강화 가능성 존재 · 사업 가시화 시점 지연 영향 가능하나, 원전/대미투자 기대감 미반영 업종 추가 다운사이드 제한적
운송		보통	중기	· 운송 업종 영향은 美-이란 전쟁 지속 가능 여부(유가) 및 관세 정책 방향성(물동량)이 판가름 · Blue Wave 시 광범위한 관세 인상에 대한 견제 강화로 미주 노선 물동량 수요는 개선 전망 · 해운업 넷제로 반대 기조는 행정부 주도로 유지. 장기적 저탄소 연료+노후 선대 교체 압박 재개 가능성 · 중동 리스크 해소는 해상 공급 차질 완화 영향 해운 업종 톤마일 감소에 따른 유훼 공급 증가 가능성
신재생		높음	장기	· Blue Wave 달성 시에도 대통령 거부권 감안 시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부활 가능성 제한적 · 인허가 여건 개선과 장기간 정권 교체 기대 고려 시 파이프라인 가시성 및 기자재 수주 여건 개선 기대 ·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 확보 및 인허가 개혁은 초당적 어젠다이나 발전원별 선호도 차이 존재 · Blue Wave 시 신재생 업종 유리하나, 태양광은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 공급망 배제 기조 유지 예상 · 풍력은 인허가 개선, 태양광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에 따른 국내 밸류체인 수혜 기대.
철강		높음	장기	· 초당적 보호무역 기조로 철강 관세 50% 유지 가능성 높음 · 미국산 구매 확대와 저탄소 철강 지원은 긍정적이나 국내 수출 부담 지속 · 현지화 가능한 기업들 수혜 예상
비철금속		보통	장기	· 탈중국 핵심공물 공급망 구축과 전력망/친환경 투자 확대는 초당적 어젠다로 지속 전망 · 대규모 투자비 부담은 리스크
자동차		높음	중기	· 민주당 승리 시 EV 지원·환경규제 강화 기대는 긍정적 · 자동차 관세 15%와 연비규제 완화는 유지될 가능성 높음 · HEV 경쟁력 및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핵심
유틸리티		높음	단기	· 민주당 하원 확보 시 신재생 지원의 추가 축소 견제 가능. 양원 확보 시 정책 보완 협상력 확대 기대 ·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행정부의 신재생 인허가·세제 집행 강화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며, 원전에는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초당적 지원과 인허가 개선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민주당의 신재생 지원 유지·보완은 사업성 개선→발전→실적 경로로 태양광·풍력·ESS 업체에는 긍정 · 원전·연료전지는 신규 발전과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수요의 수주·이익 전환이 중기 추가 상승의 관건
정유/화학		낮음	중기	· Blue Wave 시 화석연료 중심 정책 견제 강화 예상. 다만 기존 정책의 전면적 수정 가능성 제한적 · 정유는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투심 위축 우려에도 정제마진, 조달비용 및 운임 등 업황 변수가 중요 · 화학은 친환경 소재 수요 확대가 긍정적, 범용 석유화학은 中 공급과잉 및 글로벌 수급 개선 여부가 핵심
2차전지		보통	중기	· Blue Wave 시 친환경 정책 후퇴를 견제하며 EV·ESS 산업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 · IRA 생산세액공제 및 ESS 투자세액공제 정책 지속성 기대 강화. EV 구매 보조금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 · 북미 생산기반 보유 업체 수혜. 소재는 ESS 수주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이 관건
전기전자		낮음	중기	· AI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에 따른 수혜 강도 변화 · 관세 정책에 따른 B2C 수요 변화도 주목할 포인트
디스플레이		보통	중기	· 중국산 패널 규제 지속 전망. BOE의 애플 공급망 내 입지 약화 시 국내 패널사 M/S 확대 전망 · 단기간 내 국내 패널사의 모바일 OLED 중실 계획 없는 만큼, OLED 패널 수급 균형 개선 가능성 ·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기조+초당적 대중국 공급망 견제→폴리실리콘 대안 비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부상

자료: 신한투자증권

업종별 美 중간선거 Blue Wave 영향 Comment				
업종명	Blue Wave 기상도	영향 강도	영향 시점	주요 내용
제약/바이오		보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ue Wave 시 Medicare 협상 확대와 MFN 법제화 등 약가 입법 재부상, 가능성은 낮지만 초당적 협력 통해 약가 인하 법안 통과 시 빅파마 할인율 상승 232조 관세·MFN/TrumpRx는 행정 조치로 지속, BIOSECURE 통한 중국 견제는 지속 전망 세출권 확보로 NIH·FDA 예산 복원, Medicaid 삭감 일부 철회 → 바이오텍 및 CMO 수혜
유통		낮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영향은 제한적, 美 소비심리 변화가 국내 수출·고용·자산시장, 환율 및 수입물가로 이어지는 간접 파급효과가 핵심 변수 환율 상승 시 인바운드 수혜 업체 주목, 백화점 등 외국인 인바운드 노출도가 높은 업체에 우호적
음식료		낮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 가능성은 낮음, 관세/농업 지원/식품 관련 예산 등 정책 강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내 생산 확대 기조는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유지될 전망 관세 불확실성 노출도와 현지 생산 대응 전략에 따라 기업별 실적 및 주가 차별화 이어질 것
통신		낮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실적/주가 영향 제한적 데이터센터 사업 관점에서의 AI Capex 집행 속도, 배당주 상대 매력도 관점에서의 금리 중요
인터넷		낮음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플랫폼은 내수 중심으로 미국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다만 Blue Wave 시 AIDC 건설 및 운영 규제 강화된다면 AIDC 프로젝트 지연 우려 AI 인프라 투자 위축 시 일부 기업 간접적인 투심 영향 예상
게임		보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의회 구도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Blue Wave 시 빅테크 반독점 규제 논의 강화된다면 앱마켓 수수료 인하 압력 확대 가능성 존재 Apple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및 외부결제 허용 확대 시 韓 게임사 수수료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 가능
화장품		낮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적인 보호무역 정책 지속 여부 변화는 가능하나,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 정책 변화 가능성 제한적 기존 관세 정책 수혜는 현지 생산 가능 ODM사, 피해는 수요 둔화 우려 혹은 비용 흡수가 필요한 브랜드
엔터		낮음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 심사 강화는 초당적으로 강화 중이나, 대형 기획사 IP보다는 중소형 아티스트/스태프 비자에 영향 산업과 주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미디어		낮음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 구도 변화 시 미디어 산업 집중 관련 의회 감독 강화 여부 주의 필요 외국 영화 100% 관세는 반복 언급에도 법적 근거 불명확으로 미시행 전망 국내 미디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레저		낮음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가 → 유틸리티료 → 장거리 수요 위축은 여행사 부담 요인이었으나 종전 시 최대 수혜 예상 카지노 3사는 중국/일본 등 단거리 인바운드 고객 중심이기에 직접적 영향 미미
보험		보통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ue Wave 시 Trump 추가 감세, 돈 풀기가 막혀 美 장기 금리 안정화 및 국고채 금리 동반 하향 예상 금리 하락 시 K-ICS 비율 부담 축소 예상되나, 영업환경 자체의 부담은 존재 금리 하락 시 생보가 손보보다 더 타격, 반대로 공화당 승리 시(돈 풀기 지속 → 금리 상승) 보험은 수혜
증권		보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하원이 관세 확전을 견제하고 돈 풀기를 막는다면 약달러가 전개되며 KOSPI 외국인 수급 회복 가능성에 따라 지수에 가장 민감한 증권주가 먼저 반응 선거 후 불확실성 완화로 美 증시 상승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고, 해외 수수료 비중 큰 증권사 수혜
은행		낮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은 美 의회와 직접 연결고리가 없고, 달러 약세로 원화가 강해지면 외화자산 비중이 줄어 자본비용(CET1)이 소폭 개선되며 외국인 배당주 매수 확대 기대 은행 주가는 美 정치보다 국내 요인이 결정하므로, 중간선거는 외국인 수급 변수 정도로만 작용할 전망

자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강진혁).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